

수출투자책임관회의  
23.3.13. 09:00

#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지원 방안

2023. 3. 13.

관계부처 합동

## 순 서

I. 추진 배경 .....	1
II.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지원 방안 ....	3
1. 품목별 지원방안 .....	3
2. 수출 인프라 강화방안 .....	9
III.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.....	12

## I. 추진 배경

◇ '23년 어려운 수출여건의 조기 극복 및 수출 플러스 목표 달성을 위해 “작지만 의미있는” 추가 지원과제를 신속히 마련하여 추진

### □ (동향 및 전망) 상저하고(上低下高) 전망 속에 업종별 여건 차별화

- 지난해 우리 수출은 글로벌 긴축 전환 등 대외여건 악화로 10월부터 감소세로 전환(5개월 연속 감소)

\* 수출증감률(전년동월비, %) : ('22.9월) 2.3 → ('10월) △5.8 → ('11월) △14.2 → ('12월) △9.7 → ('23.1월) △16.6 → ('2월) △7.5

- 올해도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,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, 상반기 부진 이후 하반기 반등 전망

\* '23년 수출 전망(전년동기대비, %) : (정부) △4.5 (한은) △4.8 (무역협회) △4.0

- 다만, 수출업계를 통해 파악한 업종별 여건은 상이

- 반도체·석유화학·철강 등은 부진, 자동차·디스플레이 등은 양호, 선박·이차전지·해외수주·서비스 등은 호조 예상

#### < 주요 업종별 수출 실적 및 전망 >

(단위 : 억불, %)

	업종	'21년	'22년		'23년 전망
		금액	금액	증감률	
제조업	반도체	1,280	1,292	1.0	
	무선통신기기	192	172	△10.4	
	석유화학	551	543	△1.5	
	철강	364	384	5.7	
	자동차	465	541	16.4	
	선박	230	182	△20.9	
	디스플레이	214	211	△1.1	
	이차전지	87	100	15.1	
수주·서비스업	방산	73	173	137.0	
	원전	-	20	-	
	해외건설·플랜트	306	310	1.3	
	의약품·의료기기	163	164	0.6	
	콘텐츠	125	137	9.6	

\* 출처 : 주요 업종별 협회 및 경제단체 등 / 개선, 보합, 부진

## □ (대응) 수출여건의 심각성 인식 下 업종별 상황 집중점검 중

- 수출전략회의·비상경제장관회의 중심으로 범부처 대응체계 가동
  - 특히, 지난 2.3일 장관급 '수출투자대책회의(부총리 주재)'를 신설하여, 주요 업종·품목별 수출여건 점검 및 지원대책 집중 논의\*
  - \* 비상경제장관회의와 겸하여 개최하여 제조업(2.3일)·농수산물(2.16일)·관광콘텐츠(3.1) 등 논의
- 부처별 '수출·투자 책임관제(1급 간부)'를 도입·운영하여 소관 업종·품목\* 수출 활성화에 대한 부처 책임성 대폭 강화
  - \* 산업부(반도체·자동차·철강·선박), 과기정통부(ICT), 국토부(해외건설), 국방부(방산), 중기부(중기수출), 복지부(의약품·의료기기), 농식품부(농식품), 해수부(수산물), 문체부(게임콘텐츠) 등
-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경제상황 점검반을 확대 개편하여 업종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'수출·투자 비상대책반'도 가동 등

## □ (계획) '23년 수출 플러스 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內 정책역량 집중

- 경기회복의 돌파구인 수출활력 제고는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
  - 정부는 어려운 수출여건 하에서도 지난해 수출실적(6,837억불, 역대최고치)을 상회하는 수출 목표치(6,850억불) 설정\*
  - \* '23.2.23. 「2023년 수출여건 및 범정부 수출확대전략」(제4차 수출전략회의)
- 수출의 강하고 빠른 재반등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정부의 모든 정책역량 집중 필요
  - 특히, 수출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는 실기(失期)하지 않고 준비되는 즉시 이행

⇒ 모든 부처가 수출지원 부처라는 인식 下에, 수출산업 현장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추가 애로해소 방안 발굴 및 즉시 추진

## II.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방안

- ◇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\*를 수렴하여 심도있게 검토  
→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**품목별** 및 **수출지원 인프라 애로해소** 추진

\* 수출전략회의 논의사항, 업종별 협회 건의, 원스톱 수출·수주 지원단 접수과제, 현장간담회 제기 사항 등

### 1. 품목별 지원방안

#### 1 주력 산업

##### □ (조선) 조선업 수주 확대를 위해 RG 지원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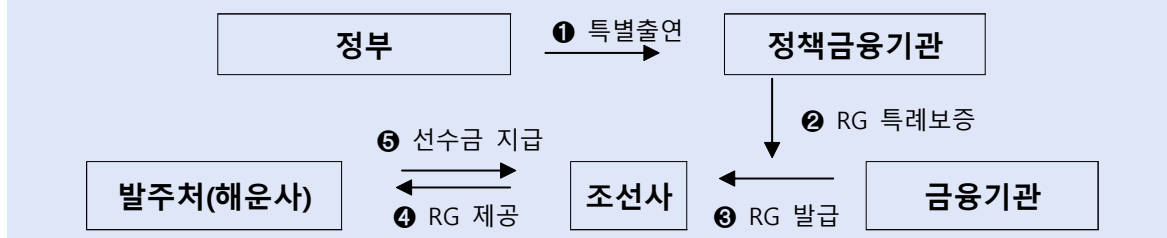
※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건의

- ▶ 해상 친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국내 조선사의 신규 선박 수주가 크게 증가했으나, 선수금환급보증(RG) 부족으로 수주에 애로(선가 상승 등 영향으로 RG한도 소진 임박)

- 조선업 수주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 지원 강화방안 마련(’23.3)
- 최근 선가 상승률과 글로벌 발주량 증가, 개별 조선사의 ’22년 실적 등을 고려하여 산·수은 등의 금융지원 확대
- 선수금환급보증(RG) 특례보증 잔여한도 활용을 지원(무보, 936억원)하고 보증비율(現 70~85%) 상향 조정 등 지원 확대방안 마련 추진

<참고> 선수금환급보증(Refund Guarantee) 및 RG특례보증 개요

- ▶ (선수금환급보증) 통상 공정별로 선박 건조대금을 일정비율 **先지급**하는데, 발주사는 **미인도 위험에 대비**하기 위해 발주계약시 선수금 지급 보증 요구
  - 조선사는 은행에 이행보증서(RG) 발급을 요청하고, 은행은 조선사 신용등급 등을 감안하여 RG 발급(조선사가 미인도시 은행이 선수금을 발주사에 반환)
- ▶ (RG특례보증) 중소조선사가 선박 수출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RG를 발급받을 때 무보가 수출보증보험(금융기관 RG 발급액의 일정비율을 재보증)을 통해 **위험분담**



## □ (자동차) 미래차 특화지원 및 선복 부족 애로 해소

### ※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건의

- ▶ 미래차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요청
- ▶ 전세계적인 자동차 운반선 부족 현상, 중국의 자동차 수출 급증 등으로 국내 업계의 완성차 수출을 위한 선복 확보에 일부 애로 발생

① 미래차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율주행, 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을 조특법상 신성장·원천기술로 추가 지정 검토

② 선적 지원 등을 통해 자동차 운반선 부족으로 인한 애로 해소

- 국적 자동차 운송사의 운반여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, 취소물량 등 가용선복 발생시 국내 완성차 업체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도록 유도
- 컨테이너 선박을 통한 자동차 수출 옵션\*을 제공하기 위해 국적선사(HMM 등)와 국내 완성차 업체간 협의 지원

\* 2TEU 컨테이너에 자동차 2~3대 정도를 적재 가능

- 자동차 운반선 시장의 향후 전망을 고려하여, 업계 수요가 있을 경우 국적 자동차 선박 수송능력 확충 지원\* 추진

\* 신규수요 발생시 해진공의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지분투자 또는 선주사업 등을 통해 자동차 운반선 조달 부담 경감 검토

## 2 新수출유망산업

## □ (농수산물) ODA와 연계한 농수산물·농기계 등 해외진출 활성화

### ※ 수산식품 기업 등 건의(제4차 수출전략회의)

- ▶ 원양어업 활성화 및 수산식품 수출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요 어장 보유 국가에 공적개발원조(ODA) 사업 확대 필요

① 원양 쿼터 확보 가능성 등도 고려하여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ODA 사업 발굴·추진

\* (예) 투발루 어촌뉴딜 ODA 사업('23~'26, 67억원), 키리바시 어촌뉴딜 ODA 사업 타당성 조사('23년) 등을 통해 수산분야 협력 증진 추진 중

② ODA 협력국 등에 트랙터·수확기 등 우리 농기계 보급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수요로 연계

- 중고 농기계 시범지원 및 수리센터·임대사업소 설치 추진

\* 세네갈 현지 타당성 조사 후 농기계 지원협력 MOU 체결(6월)

□ (디지털) ICT 및 디지털 융합서비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

※ ICT 유관기관 등 건의

- ▶ 디지털정부 수출은 장기적으로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수요를 촉발  
→ 우리나라에 강점이 있는 디지털정부 등 미래 먹거리로 육성 필요

① 디지털정부 솔루션 수출을 종합 지원하는 '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지원센터'를 신설하고, 해외정부 사업 발주 원스톱 지원\*\* 추진

\* 기업 대상 해외사업 발주정보 공유, 맞춤형 사업수주 지원, 애로사항 해소 등

\*\* (現) 국가별 타당성 검토, 환경분석 등 소규모 지원에 한정('23년 5억원) →  
(改) 상세설계, 제안요청서 작성 등 해외 정부의 사업 발주 원스톱 지원

- 디지털정부 핵심과제 또는 해외수요가 높은 정보화시스템에 대해서는 국제표준 적용 등 수출 상품화 지원도 신규 추진

② 디지털 수출기업 글로벌 진출지원의 거점 역할을 하는 해외 IT 지원센터\* 신규지역 추가 선정\*\* 추진

\* 현지 정책·시장정보 등 수집 및 상담회 등 개최, 현지 네트워킹 지원 등 수행

\*\* (現) 미국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, 베트남(하노이, 호치민) 등 5개국 6개소→  
(改) 중동(UAE, 사우디 등) 지역 신규 건립 추진

③ 디지털 전환 등 ICT 수요가 높은 유망국가(중동, 동남아 등)를 타겟으로 민·관합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 파견\* 추진('23년 2회)

\* (주요 내용) 장차관급을 대표로 수출분야 협력의제에 대한 양자면담, 국내 기업의 현지 시연, 비즈니스 미팅 등을 위한 수출 로드쇼 개최 등

④ ICT분야 수출패러다임 변화(기기 → 서비스)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·서비스 기업 간 동반진출 프로젝트 신규 지원

- 디지털 서비스가 수출국 현지 환경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현지 실증, 마케팅, 조인트 벤처 설립 등 컨설팅 지원 병행

## □ (바이오헬스) 의료서비스 및 의료기기 수출 지원 인프라 구축

### ※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건의

- ▶ 최근 유럽연합 등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(현재 유예기간 적용 중)  
→ 규정해석·기술문서 작성 어려움 등으로 EU규제 대응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

- 유럽 의료기기 인허가 기준 강화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및 지원 필요사항 발굴('23년~, 복지부, 산업부, 식약처 등)

### <참고> EU 의료기기 인허가 기준 강화 내용

#### ▶ (주요 내용) MDD → MDR로 변경

- MDD(Medical Device Directive, 지침 성격) : 의료기기 사전 인증에 초점
- MDR(Medical Device Regulation, 법규 성격) : **사전 인증 시 임상시험 의무화**, 시판 후 **정기적인 안전성 보고서 제출** 등 제품 전주기에 규제 적용

#### ▶ (적용 시기) 의료기기 등급 별로 적용시기 상이

- Class III 이식형 맞춤형 기기 : '26.5월~
- Class III, IIb 이식형 의료기기 : '27.12월~
- Class Is, Im, IIa, IIb : '28.12월~

- 메드텍 수출지원 협의체<sup>\*</sup>(보건복지부 주관)를 통한 EU의 의료기기 강화규제(MDR) 대응 지원(임상평가, 시험평가, 인증 등) **확대**<sup>\*\*</sup>

\* 보건산업진흥원(주관), 코트라, 중진공,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등 14개 기관 참여

\*\* ('23) 품목별 기술문서 작성 실습교육(15개사, 2억원), EU진출기업 맞춤형 지원(30개사, 10억원)

- 역량있는 민간 인허가 지원기관을 통한 MDR 인증이 가능하도록, 수출 바우처를 활용<sup>\*</sup>한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 컨설팅 활성화<sup>\*\*</sup>

\* ('22) 해외인증을 위한 인증비·시험비만 외부기관 활용 가능 → ('23.3~) 해외인증 컨설팅도 외부 기관 활용 가능, 해외기관 활용한 컨설팅 비용 지원 추가(중기부)

\*\* 수출바우처를 통해 해외인증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 기업 및 컨설팅 기업 대상 홍보 강화(복지부)



## □ (콘텐츠) 민간 중심의 콘텐츠 수출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

### ※ 콘텐츠 업계 등 건의

- ▶ 콘텐츠 전문인력 육성 강화 및 민간 기업 등 합동 해외진출 지원 요구

### ① 업계·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우수한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트랙·프로그램\* 개발·운영

\* 민간 콘텐츠 기업 참여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+ 제작·수출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

### ② 콘텐츠·연관업계(소비재 등), 전문무역상사, 지원기관(콘진원, 코트라 등)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K-콘텐츠 해외진출 협업체계 마련

\* 콘텐츠 및 소비재·한식·뷰티 등 연관산업 분야별 매칭을 통해 K-콘텐츠 연계 해외진출 협력모델·프로젝트 발굴·추진, 콘텐츠-연관산업 동반진출전략 논의, 우수사례 공유 등

## 3 수주전략산업

## □ (원전)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

### ※ 원전 업계 등 건의(원스톱 수출·수주 지원단)

- ▶ 원전 수출은 리스크가 큰 대규모·초장기 프로젝트 → 불안한 자금시장 속에서 원전 기자재 업체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등 원전 수출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지원책 마련 필요

### ① 원전 프로젝트 수출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이행성 보증서(AP Bond) 발급을 위한 수출보증보험\* 조건우대

\* 우리 기업이 이행성 보증(AP Bond, 계약 불이행시 발주처가 지급한 선수금의 반환을 금융기관이 보증)을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

- 특별지원한도 제공, 보험료 할인, 최대 부보율 적용 등\*

\* (한도) 책정한도의 1.5배, (보험료) 20% 할인, (부보율) 100% 적용

### ② 수출기업이 단기 유동성 확충을 위해 수출채권을 시중 은행 등을 통하여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 강화\*

\* 수출신용보증 책정가능한도 1.5배 우대, 보증료 20% 할인 등

## □ (해외건설 등) 금융지원·애로해소 등 대형 사업 수주지원 강화

※ 해외건설협회, 건설업계 등 건의(제1차 수출전략회의 등)

▶ 대형프로젝트 수주 기업 금융지원 강화, 지역별 맞춤형 원팀 코리아 구성 등 필요

### ① 시공사 금융주선형, 투자개발형 등 부가가치가 높은 해외 대형 프로젝트 사업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\*

\* EDCF·EDPF·수출금융 등을 결합한 복합금융사업 수요 신규 발굴('23~), 사우디 ARAMCO, UAE TAQA 등과 기본여신약정(F/A) 체결 추진 등

※ (단순도급) 시공, (시공사금융) 재원조달+시공, (투자개발형) 투자+기획시공·운영 등

### ② 인니 등 “원팀 코리아” 추가 구성\*으로 우리기업 수주역량을 총결집하고, 현지애로 해소 등을 위한 민·관협의체 구축 확대\*\*

\* 인니 원팀 코리아 구성('23.上), 해외 각 국 新수요 발생시 추가 구성 추진

\*\* 사우디 해외건설 협력센터 신설 추진 (~'23) → 협력수요국에 추가 구축 검토

## □ (녹색산업) 환경플랜트, 친환경 인프라 등 해외진출 지원방안 마련

※ 환경산업 업계 건의(녹색산업 얼라이언스, 제1차·제4차 수출전략회의 등)

▶ 환경산업 특성상 상대국 정부와의 소통 관련 리스크 큼 →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지원 필요

▶ 아세안 지역 등 전기차 인프라 구축 등 통해 우리 기업의 전기차 시장 선도적 진출 지원 필요

### ① 환경플랜트 수주 등 녹색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민관 소통 확대, G2G 협력 강화, 재원 조달 등 지원대책 마련(2/4분기)\*

\* (민관소통) 녹색산업 얼라이언스('23.1월 출범) 통한 애로 해소, 맞춤형 지원전략 수립 (G2G협력) 수주지원단 파견 등 통한 협상 지원, 정부간 네트워크 활용 등 (재원조달) 녹색채권 발행·용자 지원, 관련 펀드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 기업 지원

### ② 개별국가 수요를 고려하여, 친환경 e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을 위한 ODA 등 지원사업 확대·발굴

※ 현재 ASEAN 대상 ▲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사업(인니) ▲전기차 기업 대상 생산애로 해소 지원 (태국), ▲지능형교통시스템(ITS) 마스터플랜 및 시범시스템 구축(인니) 등 ODA 사업 추진중

## 2. 수출지원 인프라 강화방안

### 1 무역금융 공급 확대

※ 수출기업 등 건의(무역협회·중기중앙회·정책금융기관 등 조사)

▶ 고금리로 수출기업 자금조달 애로 + 정책금융 신청절차 등 복잡하여 이용에 어려움

#### □ (추가지원) 수출중소·중견기업 무역금융 공급 2조원 추가 확대

- 무역금융 공급 2조원 추가 확대<sup>\*</sup>(금년 무역금융: 최대 362.5조원 → 최대 364.5조원<sup>\*\*</sup>) 등 수출기업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

\* 3월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수출중소·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0.6%p 금리우대하는 신규 프로그램 공급 예정(산은, 2조원 규모) 등

\*\* 무보 260조원, 수은 82조원, 신보 14조원, 기보 3.3조원, 중진공 0.4조원, 산·기은 2조원→4조원, aT공사 0.5조원 등

#### □ (전달체계 개선) 무역금융 등 전달체계 개선으로 지원 실효성 제고

- ① 기업이 무역금융 등 정책금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(‘23.4.)

\* 기재부·산업부·중기부·금융위 및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현장조사팀을 구성해 전달체계 관련 현장 애로 수렴 → 정책금융 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·발표

- ② 무역금융 공급기관 등과 함께 무역금융 공급실적 정기 점검 → 필요시 신속집행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 마련

### 2 인증·마케팅 지원

#### □ (인증)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

※ 수출중소기업 등 건의(제1차·제4차 수출전략회의 등)

▶ 수출을 위해 해외인증 취득시 요건 등이 복잡하여 정부의 정보제공·컨설팅 등 지원 필요  
▶ 기존에 없던 융합 신기술 등을 상품화하는 경우 국내·외 인증에 어려움

- 정보제공·컨설팅·취득비용 등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창구\*를 구축(4월 중)하여 지원 대상 기업의 편의 제고

\* UL(美), CE(유럽) 등 해외인증 취득 소과정에서 관련 부처·사업 연계를 통한 종합 지원(23.4월 중 '해외인증 지원단' 신설 및 '해외인증 종합 지원포털' 구축·운영)

↳ 무역협회, KOTRA, 중진공, 표준협회, 보건산업진흥원, 시험인증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 중

- 신기술 등에 대한 국내외 인증 지원체계 연계\*도 병행 추진

\* 예: 융합 신기술 등 국내 샌드박스 적용 및 해외인증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등

## □ (마케팅) 범부처 합동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

### ※ 수출중소기업 등 건의

- ▶ 해외전시회를 유관 부처·기관 등이 각각 운영하여 '팀 코리아'로서의 브랜드 가치 약화 + 他분야 해외전시회에 대해서는 참가가 어려운 측면

- 부처간 협업을 통해 他부처 소관 분야 등 보다 다양하고 많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

→ 범정부 협의체 통해 통합한국관 확대\*, 범정부 해외전시회 통합 플랫폼 구축 등 해외마케팅 시너지 강화방안 마련 추진

\* 범정부 공통 로고 사용 활성화, 전시부스 디자인 통일성 제고 등

-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모집·선정시 부처간 협업 강화

- ▶ (모집 전) 관계부처 대상으로 지원대상 선발기준 등에 대한 의견수렴 진행
- ▶ (모집) 관계부처는 소관분야의 기업 대상으로 전시회 참가지원 안내·홍보
- ▶ (선정) 지원대상 선정과정에 관계부처도 참여하여 의견·정보 공유

\* (예) 국제식품박람회 참가기업 선발시 중기부가 보유한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와 농식품부의 식품기업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공유하는 등을 통해 협업

### □ (관세) 간이정액환급 제도 활성화로 수출중소기업 행정부담 완화

#### ※ 수출중소기업 등 건의

- ▶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실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 원칙(개별환급)이나, 간이환급은 산출 과정 없이 제조·수출사실만으로 품목별 일정 금액을 즉시 환급하는 등 행정부담 완화
- ▶ 수출중소기업 활용편의 제고를 위해 간이정액환급 제도 개선 건의

#### ○ 환급신청기간 확대(2년→5년, '23.1월 시행) 및 간이정액환급 대상 기업 범위 명확화\*(3.17. 시행 예정)

\* (현행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(3년)에 있는 기업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 불분명 → (개선) **3년간 유예기업도 포함**

- 간이정액환급제도 활용도 제고방안 추가 검토('23.下)

### □ (통관) 인증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편의 개선

#### ※ 수출중소기업 등 건의(원스톱 수출·수주 지원단)

- ▶ FTA 등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세관 담당자가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, 위반 위험이 낮은 “인증수출자”는 자동심사(약 3시간 소요, 업무외 시간도 발급가능)도 허용 중
- ▶ 다만, 온라인 신청 후 자동심사 대상인지 알기 어려워 세관에 전화 확인 등 애로

#### ○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온라인 신청화면을 통해 자동심사 여부 등을 표시\*하여 발급 시점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

\* (현행) 자동심사 여부를 알기 어려움 → (개선) 온라인 신청화면에 자동심사 여부를 표시하되, 발급완료 전 세관담당자 심사 대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

### Ⅲ.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

과제		주관 부처	추진시기
주요 품목별 지원방안			
주력	조선사 수주 확대를 위해 RG 등 지원 강화방안 마련	산업부·금융위·기재부	'23.3.
	미래차 기술 세제지원 강화	기재부	'23.3.~
	자동차 선적 지원 강화	해수부	상시
新수출유망	원양쿼터를 감안한 태평양도서국 ODA 사업 추진	해수부	상시
	ODA 협력국 등에 농기계 보급 확대 등	농식품부	상시
	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센터 설립 및 원스톱 지원	행안부	'23.6.~
	해외 IT 지원센터 신규지역 추가 선정 추진	과기정통부	'23.3.~
	민관합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 파견	과기정통부	'23.6.~
	플랫폼·서비스기업 동반진출 프로젝트 지원	과기정통부	'23.3.~
	유럽 의료기기 인허가기준 대응 지원 강화	복지부·산업부·중기부 등	'23.3.~
	콘텐츠 수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·운영	문체부·과기정통부	'23.3.~
수주전략	K-콘텐츠 해외진출 협업체계 마련	문체부·과기정통부	'23.3.~
	원전 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	산업부	'23.3.~
	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금융지원 강화	기재부	'23.3.~
	인니 등 원팀 코리아 및 민·관협의체 추가 구성	국토부	'23.3.~
	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대책 마련	환경부	'23.6
	친환경 이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등 ODA 확대	산업부·환경부 등	상시
수출지원 인프라 강화방안			
수출인프라	무역금융 등 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	기재부·금융위·중기부 등	'23.4.
	수출기업 추가 금융 지원	기재부·금융위 등	'23.3.~
	해외인증 원스톱 지원체계 등 구축	산업부·과기정통부 등	'23.4.~
	범부처 합동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	산업부·중기부·문체부·농식품부·해수부 등	'23.12.
	간이정액환급제도 활용도 제고방안 추가 검토	기재부	'23.下
	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 발급 편의 개선	관세청	'23.下

⇒ 수출투자책임관회의 정기 개최를 통해 수출지원정책 **추진현황** 면밀히 점검  
+ 각 부처 **수출투자책임관** 책임 下 “작지만 의미있는” 과제 발굴 지속